글로벌대학 탈락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

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벌 대학 10개 대학 선정에서 전남대가 탈락하게 되자 전남대 모든 구성원들은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.

먼저 대학본부가 글로벌에 선정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남대 탈락 사유가 **기획서의 혁신성 부족, 지자체(전라남도)와 연계 협력 부족, '지역 혁신 플랫폼' 사업에서 드러난 횡령 비리** 등이 전남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유감과 대학 본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. 선정된 순천대의 경우, 이러한 감점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남대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전남대 위상과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. 대학 본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할 것이다.

물론 이 선정 결과를 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, 공정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. 산업 인프라가 압도적 유리한 경상지역의 경우 무려 5개 대학이 선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전라지역은 2개 대학만이 선정되었다. 그리고 통합을 추진한 국공립대학들은 다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통합형 기획서를 제출한 전남대는 애초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.

우리 제42대 교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견지,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미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**'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'(RISE)의 일환인 글로벌 사업의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해왔다.** 다행히도 이 글로벌 사업은 정부가 고등교육 책임을 회피하려는 **'지방대학육성법' 전면재개정(일명 '글로벌대학법')**을 통해 법적으로 아직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다. 「법」 개정(안)은 “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”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, **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이기**에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.

글로벌 사업이 대학의 친(親)시장화 및 무리한 구조조정(학교 통폐합, 무전공 추진 등 기초학문 파괴)과 지자체에 대학의 재정 관리 감독권을 양도하며 **'지역고등교육위원회'**에 대학이 의존하도록 짜여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미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. 이번 글로벌 사업에 탈락한 전남대의 입장에서 보면,

오히려 기존의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.

향후 대학본부는 이 글로컬 사업에 재신청을 할지 말지 여부도 역시 교내 구성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.

그리고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.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전남대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국립대학으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가 자성하고 노력하기를 기대한다.

2023. 11. 14.

전남대학교 제42대 교수회장